

광주시민 10명중 7명 “외국인과 결혼 관찮다”

‘가족 다양성 수용’ 의식 조사 “결혼 않고 혼자 산다” 56% 비혼 동거·비출산은 거부감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수용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2일 광주시가 발표한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71.1%), 이혼이나

재혼(66.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56.0%)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절반 이상이 수용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47.3%),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42.8%),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30.9%),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17.4%)에 대한 수용도는 낮았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20대는 독신(91.8%), 외국인과의 결혼(86.6%), 자녀 비출산(86.1%), 이혼·재혼(81.6%), 비혼 동거(79.6%) 등 전반에 걸쳐 다른 연령대보다 수용도가 매우

높았다.

가족 다양성 지원 정책 대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90.2%), 저소득 미혼모부(88.1%), 다문화 가족(77.0%), 1인 가구(74.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족의 정의와 관련해서 법적 혼인이나 혈연에 의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한다(68.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혼인·비혈연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60.3%,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인식

은 38.3%였다.

이번 조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3~14일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p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민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민의 평균 수용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도시답게 모든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도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인건비, 고용 유지 지원금 보조 사업을 확대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접수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업체당 신규 채용 인력 1명을 지원하던 것을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최저 인건비의 50%,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33만5000~89만8000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각각 1000명씩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 700여명, 중소기업 5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정부 방침과 연동

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시책도 9월까지 연장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상당 일부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으려는 취지로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려고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했으며 광주시는 사업주 부담액인 나머지 10%도 지원했다.

현재 1500여개 기업, 1만1000여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의 고용 충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중소기업 등은 경영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협약식 2일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협약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최도성 교육대학교 총장, 문창희 주민협의회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광주교육대 제2운동장 테니스장을 복합체육센터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정보공유,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도내 사찰 670개소 마스크 착용 ‘이상무’

합동 점검 결과 행정명령 준수

전남도가 도내 사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전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사군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도내 670개소 사찰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현재 전남지역 내 문화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송광사와 대흥사, 화양사, 백양사 등 97개소로 전국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사찰은 573개소에 이르고 있다.

점검결과 모든 사찰은 마스크 의무 착용과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은 물론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1m 이상 거리 두기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출입 대상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순 쌍봉사, 곡성 태안사 등의 사찰들은 자체적인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해남 대흥사는 사찰 진입로로부터 승차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이밖에 전남도는 사찰내 문화재 시설 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설물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양사 주지인 무공스님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의 호국 불교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확정 후 진행돼야”

이정환 광주시의원 주장 10일까지 시의회 임시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도 구성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구 5)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이전할 경우 군공항 이전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시·도는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협약 이후 2년이 지났으나 군공항이

전엔 진척이 없고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 시기가 벌써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 버스 신설, 주차장 요금 감면·환인 등 대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성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합의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은 어떠한 의견도 표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위기에 따라 본회의 참석 집행부 공무원 숫자를 기존 39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본회의 운영방식을 변경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2020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39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4건, 보고안 3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또 이날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위원회(약칭 그린뉴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과 최장 기간의 장마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위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김광관, 박미정, 신수정, 이경호, 이정환, 이홍일, 장연주, 정무창, 정순애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구의회, 타 시·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정 그린거버넌스 구축, 기후예산제 도입 등 그린뉴딜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펼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마을 기업 상생 샵’ 1호 매장 광주에 문 연다

오늘 홈플러스 계림점서 개장

광주 마을기업 전문 판매장이 대형 마트에 입점한다. 광주시는 ‘마을 기업 상생 샵(#)’ 국내 1호 매장이 3일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 1층에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마을 기업 상생 샵은 상생의 가치를 높

인다(#)는 뜻과 가게(shop)를 함께 담은 이름이다. 매장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운영하며 지역 64개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류, 공예품 등 50여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홈플러스 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소규모 판매장 운영 사업에 선정돼 최근 홈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운영 기관, 광주 마을기업연합회, 홈플러스와 상품 개발, 입점, 기획전 등을 추진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많은 시민의 이용으로 착한 소비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2호점 조성,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성별 영향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

성평등 확산 정책, 정부가 인정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5개 기관이 대상이었으며, 기관별 ‘2019년 성별 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

서’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됐다.

광주시는 사전적·적극적 성인지 정책 추진으로 성 평등 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장 공약, 성별 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 162건 사업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성인지 예산 60건을 운영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국으로 승격시

키기도 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 등 14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1819명의 내부 직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안전, 일자리, 공약 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74건을 확정해 생활밀착형 사업에 성별 영향평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증-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소속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소속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소속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저희 서정환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환빌딩)
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에서 약 60m/리미타 서울호텔 맞은편

서정환의원 seojung.com

소아비만, 성소속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